

## 축하의 말씀

존경하는 김홍범 한국금융학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오늘 “위기의 한국 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추계 정책심포지엄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의 정책 심포지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연 이어 드러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업계의 제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고쳐질 수 있는 표피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결함에서 야기되는 구조적인 것이라는 인식에서 현재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고, 그러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한 다음 그것에 근거해서 무엇을 어떻게 고치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발표를 맡아 주신 전성인, 원승연, 김동원 세 분 교수는 이 방면의 탁월한 전문가로서 우리들에게 이 문제의 본질을 명쾌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슬기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패널토론에 임하시는 김대식 교수님을 위시한 여섯 분 토론자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석학들이십니다. 이러한 면면을 보건데 오늘의 정책심포지엄이 앞으로 우리 금융이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제가 금융과 관련하여 생각해오던 바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금융은 실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은 경제의 흑자부문으로부터 자원을 조달해서 이를 적자부문에게 배분합니다. 이때 적정량의 자원을 동원해서 수요자의 필요에 맞추어서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배분된 자원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배분한 자원의 원리금을 회수해서 흑자부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금융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제반 거래활동에 수반하는 채권과 채무를 결제 처리하는 일입니다. 금융의 또 다른 기능은 금융거래에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마련인 각종 위험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금융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실물부문이 원활하게 돌아감은 물론 금융부문 그 자체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은 종종 문제를 일으키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금융위기는 거의 예외 없이 경제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금융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경제위기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업들이 도산하며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위시해서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카드대란, 가계부채 위기, 미국 발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내재하는 정보비대칭성에서 연원하는 역선택의 문제와 주인-대리인 문제, 부분 지급준비금 하에서의 신용창출에 따르는 지불 불능의 위험성과 예금인출사태, 근시안적 경쟁에서 비롯되는 금융의 쏠림 현상에 따르는 과도한 위험성, 업황이 좋을 때는 크게 늘리고 나쁠 때는 급격히 축소시키는 경기 순응적 신용공여 행태 등이 금융위기의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그렇듯이 우리는 금융의 순 기능은 강화하고 역 기능은 시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금융의 게임 룰을 새로 짜고 금융관련 제도를 혁신하는 것을 통해 금융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노력으로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금융의 순 기능을 강화하고 역 기능을 시정하는 일은 ‘공공재’의 영역에 속합니다. 누가 해주면 좋지만 내가 먼저 하고 싶지는 않으며 어느 소수가 시도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모든 참여자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시장참여자의 자율에만 맡겨 둘 수가 없습니다.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이 필요한 연유입니다. 정부는 정책과 감독 기능의 수행을 통해서 금융이 제대로 돌아가게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고도의 식견과 경륜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관행에 따라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면 금융이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금융정책 당국자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해서 효율적으로 정책과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하게 갖추었는지는 자못 의문되는 바가 큼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들이 하나 같이 우리 금융의 ‘위기 상황’을 정책 및 감독 당국의 ‘미숙함’에서 찾고 있음은 아마도 그런 인식의 발로인 듯합니다. 저는 그러한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정책 및 금융 당국자들이 모든 일을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료 제도가 진정한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감독 당국자가 종종 피 감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기도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정책 및 감독 당국자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우리의 금융과 우리의 경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정은 높이 살 일입니다. 사실 정책이나 감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도와 규범 그리고 관행이 담당자들로 하여금 국민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장치’가 제대로 짜여있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련 학자들이 할 일은 정책 및 감독 당국자들을 올바른 길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규범과 관행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점은 금융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금융업 종사자들 특히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층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보상은 과도하게 받는다고 비판합니다. 금융업 전반의 저조한 수익성, 지지부진한 성장성, 안정성에 대한 광범위한 의구심 등을 보면 그러한 비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와 신용정보 누출 사태와 최고 경영자 간의 갈등 표출 사태 등이 우리나라 금융에 관해서 암울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 역시 최고의 책임자가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층으로 성장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객의 이익 증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경영활동을 전개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데 문제의 원인이 있는 듯합니다. 금융 산업에 합당한 거버넌스 구조가 무엇인가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일고 있음은 그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자들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배구조 관계와 사외이사제도의 효용성 등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평생을 학교에 몸담고 있던 교수나 커리어의 대부분

을 정책 또는 감독 당국에서 경륜을 쌓아온 관료들이 금융기관의 최고 수장이 되기에 적합한가 하는 점입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대학교수나 고위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이 되는 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언필칭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에는 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없는가하고 반문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대학교수나 전직 고위관료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하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표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나 고위 관료가 금융기관을 경영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갖추었다면 다행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닌 유일한 장점이란 정치권의 핵심인사나 정책 및 감독 당국과의 연이 깊다는 점인 듯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이 금융부문에 대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좌이기도 합니다.

금융을 전공하는 동학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금융의 자원배분기능과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기능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위기에 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며, 금융안정 및 금융시스템 안정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금융과 소득 및 재산의 분배에 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금융과 평균 또는 총량지표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금융과 분배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융은 분배 상태를 개선하는데 공헌할 수도 있지만 분배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금융이 분배 상태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그 동안의 경험을 보면 악화된 또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배 상태를 시정하는 데에 금융이 도구로 쓰였으며 지금도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조정금융, 중소기업지원 금융, 미소금융, 서민금융 등이 그러한 예가 됩니다. 이렇게 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이 아주 빈번하게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금융이 과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했다면 그 비용-편익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는 듯합니다. 이는 금융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 특히 한국금융학회 회원 여러분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천착해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학회 임원 여러분과 발표 및 토론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 한국경제신문사에도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